

# POLITICS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논의 본격화

### 검찰청 내년 10월 ‘문 단아’

###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의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뒤 내내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이들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공공형 어린이집 10곳 추가

### 도. 부모 안심환경 조성 기대

전남도가 도내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했다.

도는 30일 시군 추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심사 결과, 총 10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남의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96곳으로 늘어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433곳)의 22.1%를 차지하게 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우수 시설을 선정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시설·환경, 보육 서비스, 교직원 운영 관리 등 1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종 대상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 어린이집에는 오는 2028년 9월까지 3년간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기본보육반당 월 40만원), 유아반 운영비(월 60만원), 교육환경 개선비(제원 아동 1인당 월 1만5000원)가 지원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며 “아이, 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지방시대위,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

### 예산 배분체계 마련...지방우대 기준 적용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이하 ‘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열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면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이번 회의에서 김경수 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 단위로 연결·조정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30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광주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지원센터’ 착공

### 빛그린산단에 657억 투입...자율주행 핵심부품 거점 구축

### 내년 준공·장비 21종...연구개발·인재양성 등 기업 지원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내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지원센터’가 첫삽을 떴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된 제2기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 중 처음이다.

광주시는 30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주관기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김성진 원장 등 유관 기관장,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다.

지원센터는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핵심 인프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해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인지·제어·통신) 국산화 및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자율주행차 맞춤형

교육, 자율주행차 부품 상용화를 위한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657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연면적 2850㎡,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고 자율주행 안전성능 평가 장비 21종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사업을 2028년까지 진행한다.

시는 이번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광주 제조업의 44.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생존과 미래차산업 대전환 대응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게 된다.

또 자율주행 핵심부품(인지·제어·통신) 국산화 지원 및 실증 기술력 확보, 미래차산업 생태계 조성 등 광주시가 미래

차 선도도시의 위상을 한층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진국일민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까지 약 220만평을 ‘미래차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받았다.

올해 2월에는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확정돼 국가산단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미래차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제1의 미래차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국정과제로 반영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과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연계해 광주가 AI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쏟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기금 운용 투명성·거버넌스 강화...지속·안정성 담보돼야”

### 양부남, 지역사회상품권 기금설치법안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 을·사진)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법안’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의 예산 의존 구조를 넘어 기금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법안 체계와 그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영역연구소 주관 이번 간담회는 서울 노원구 의회 윤선희 의원의 사회로 정성훈 한국지역영역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과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센터장, 이상원 시정군수구청장협의회 실장, 한승현 한국지역영역연구소 지자재평가단장, 전성민 가천대 교수, 행정안전부 지역경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 : 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5극3특 추진기반 : 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 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만 교

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 간의 초광역 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

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2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차 의원을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당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주요 정책 개발과 수립, 정부 정책 검토 및 대안 제시, 국회 의안 심의, 정책 홍보 등을 총괄하는 기구다.

차 의원은 “당의 정책 비전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책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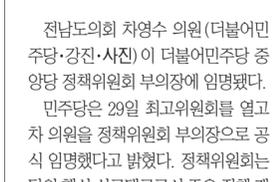
원회 부의장으로 서 지역과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는 전남 지역 현안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지방 균형발전, 청년·노인 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과제를 중앙당 정책과 긴밀히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차영수 도의원

### 지역 현안·중앙 정책 잇는 가교 역할 다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2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차 의원을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당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주요 정책 개발과 수립, 정부 정책 검토 및 대안 제시, 국회 의안 심의, 정책 홍보 등을 총괄하는 기구다. 차 의원은 “당의 정책 비전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책위

원회 부의장으로 서 지역과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는 전남 지역 현안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지방 균형발전, 청년·노인 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과제를 중앙당 정책과 긴밀히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민사책임 강화

###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동시에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경제형법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철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법 만능주의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리고, 민사 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법 규정 110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우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제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

바꾸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장 명령으로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경제형법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증거개시 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증거개시 제도는 기업 등 소송 상대방이 가진 자료, 문서, 정보 등을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기업 내부 자료를 확보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개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국회 내 추진’ 등의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바꾸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장 명령으로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경제형법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증거개시 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증거개시 제도는 기업 등 소송 상대방이 가진 자료, 문서, 정보 등을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기업 내부 자료를 확보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개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국회 내 추진’ 등의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서구의회 “호남 화재 망언 국힘 의원 사죄 촉구”

광주 서구의회가 최근 ‘호남에선 불 안 나냐’ 등의 망언을 내뱉은 김경재 국민의힘 의원을 규탄했다.

3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고경에 서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김경재 지역 상공인이 기금 운용과 해택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신뢰와 참여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현 단장은 “일분초령 회계는 분리하되 운용은 통합하는 모델을 참고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선 불 안 나냐”라는 발언을 하며 대형 산불 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아픔을 조롱하고,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망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경에 서구의원은 “호남은 5·18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지켜온 곳이다”며 “호남의 가치를 조롱하고 국민 통합을 파괴하는 해당 의원의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즉각적인 사죄와 징계를 요구하며, 망언 제조자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표결 직후, “호남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